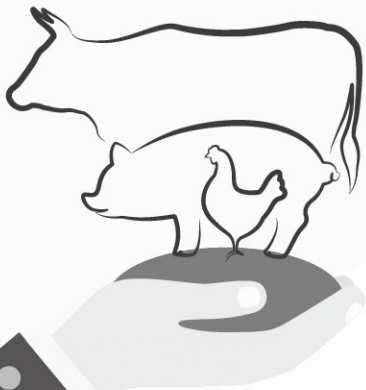


## 축산환경 개선에 관심을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장



우리나라 축산업은 2015년 기준 농업 총생산액의 40.8%를 차지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 생산액은 1995년 6조원, 2000년 8조원, 2010년 17조원, 2015년 19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축산업은 농민들에게는 높은 수입을 창출해주고, 국민에게는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축산업의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58.3점으로 그리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악취, 수질·대기오염, 동물질병 등 환경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된다면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축산환경’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 최근 들어 축산환경을 축산으로 말미암은 자연생태계 오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하지만 오염은 축산환경을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축산환경은 ‘가축 사육장소와 주위의 상태, 그리고 사육을 통해 얻는 물자를 생산·이용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이라는 의미로 폭넓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꾸고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열악한 축사시설과 사육환경, 가축분뇨로 인

지금까지 정부의 축산환경 개선정책은  
가축분뇨 처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한 악취, 가축분뇨 자원화 미흡, 퇴·액비의 품질 저하, 축산농가의 책임의식 부족 등으로 축산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축산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축산업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기보다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축산환경 개선정책은 가축분뇨 처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래서 축사 시설 현대화를 통한 악취제거,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에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축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우선 축산환경 통합관리·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육마릿수, 농경지 면적, 지역 내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 최적의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두번째로는 체계적· 과학적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빅데이터(디지털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방대한 양의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별· 농가별 축산환경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말한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지역별· 농가별 가축분뇨 처리량, 악취발생량 등을 사전에 파악

할 수 있어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를 미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세번째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미래형 축사 모델 개발과 축산환경 개선사업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지역별로 환경이 다르기에 그에 맞는 축사 모델이 개발돼야 하며, 축사에는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이 도입돼야 한다. 또 지역별로 사육하는 가축 종류 등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별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 전문가 육성이다. 축산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산환경 개선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문인력은 축사시설 관리, 악취·분뇨 처리, 가축분뇨의 이용 등 축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농민신문 2017.7.3

